



濁流清論

제7호 2010년 6월 7일(월)

발행인 : 박영무 / 편집 : 편집위원회

< 알려드립니다 >

◇ 화요보고대회

- 일시 : 매주 화요일 11시 45분
- 장소 : 을곡관 1층 로비

1월 12일(화) 부터 매주 화요일 11시 45분-12시 45분에 화요보고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학이 대학다울 수 있도록 재단의 변화를 촉구하고 대책을 논의하기 위함입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교수회 대의원 또는 교수회 사무실(구내 2240)로 문의 바랍니다. 많은 교수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수시로 원고 접수합니다.

보낼 곳은 교수회. 이메일 (makim@ajou.ac.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솔밭에서 : 문제의 제기	1
답답한 아주대	3
대학과 교수회	4
자유 투고 1, 2 :	6
소식	9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11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광고	12
편집위원회 : 강명구(편집책임), 구형건, 김혜선, 노명우, 이순일, 이재호, 한호	

배경사진은 김효동(미디어학부) 교수작 을곡관 앞 낙락장송입니다.

더불어 푸른 솔밭에서:

교수회: 두 얼굴에 비친 빛과 그림자

- 문제의 제기(편집위원회)
- 답답한 아주대(이 상혁)
- 대학과 교수회(박 영무)

문제의 제기

편집위원회

‘좋은’ 대학이 되려면 대학의 각 구성원들이 취해야 할 바람직한 상(象)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로 지난 3호 이래 연재물을 실고 있다. 재단, 총장, 보직교수에 이어 교수회가 이번 호의 주제이다. 재단이나 총장 등 보직 교수에 비하여 교수회의 역할은 좀 다르고 또한 그해야만 한다. 교수회는 두 얼굴이 있다. 한 얼굴은 지성(知性)의 거울에 비친 보편성의 얼굴이다. 대학 본연의 임무는 연구와 교육을 통해 좁게는 그 대학이 속한 사회와 국가, 가장 넓게는 인류사회의 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교수는 이런 대학 임무의 중심에 서 있으며 교수회는 바로 그런 교수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조직체이다. 당연한 귀결로서 교수회는 대학이 이러한 보편적 책무를 제대로 수행하는지 감시하고 동시에 제 스스로에게도 물어야만 한다. 그 과정에서 교수회는 자연스럽게 대학의 중심 가치를 담론의 형태로 만들어 내고 스스로 그 중심 가치에 구속된다. 그런 의미에서 교수회는 ‘자유와 자율의 도덕적 구속’이라는 이율배반적 상황을 숙명처럼 안고 살아야 하는 조직인 것이다.

그러나 보편적 가치 생산자로서의 교수회 역할이 교수사회의 일상을 꼭 지배하는 것은 아니다. 교수회 일상의 언술(言術)은 교수사회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지식인 이익 집단으로서의 얼굴로 나타난다. 중앙일보(혹은 주변일보?)¹⁾의 대학 순위 결과 발표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타 대학과의 순위우열비교에서 얻(혹은 잃)을 수 있다고 믿는 만족감과 이익의식 (혹은 불안감과 피해의식)의 대변인 것이다. 아울러 교수회는 대학의 경영진과 부속 행정조직이 취하는 일련의 통제행위에 대항하여 교수사회가 보다 유리한 물질적, 정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행동한다. 급여, 승진, 연구년 파견, 강의시수, 업적 및 강의평가 등 등 아주 잡다한 사안들이 우리네 교수사회의 일상을 지배하고 이런 사안들에 대하여 교수회는 교수사회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능을 가진다.

일반인의 상식 수준에서 보자면 보편적 가치 생산자로서의 교수회 역할은 칭송과 존경의 대상인 반면, 지식인 이익집단적 성격의 교수회 역할은 이른바

철밥통²⁾ 논리로 비난 받는 것이 실상이다. 그러나 교수같은 신성한 직업이 무슨 노동조합이나? 스승이 노동자냐? 라는 비난이 나오는 것이다. 이분법에 근거한 비난의 연유는 다양하다. 자기 수양과 대의(大義)에 목숨까지도 걸었던 선비전통에 대한 경외심의 발로일 수도 있고, 약한(?) 노동 강도에 비하여 과도한 사회적 지위와 소득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질서도 한 몫 한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이익집단으로서의 교수사회가 제 필요할 때는 학문적 자율과 자유라는 보편성의 옷을 걸치고 무대 위에 나타나는 도덕적 해이의 경우도 무시하기 힘들다.

그러나 보다 본질적인 연유는 아마도 이익 혹은 이해관계에 대한 우리네 한국인들의 솔직하지 못한 이중적 태도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교수사회도 물론 예외는 아니다. 선비나 군자연하는 모습의 또 다른 이면에는 야간 특별강좌 수당을 헤아리고 해외학술 논문 게재 보상액수 산정에 대한 적잖은 관심이 자리 잡고 있음이 엄연한 사실이다. 제 이익에 대한 별거벗은 탐닉은 물론 교수사회의 경우 일반에 비하여 더욱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현실을 굳이 무시해서도 아니 될 것이다. 대학은 교수들의 학문 수련의 장이자 동시에 삶 터 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학의 보편적 가치추구를 지고(至高)의 선으로 여기는 이상주의자들에게는 교수회의 이익집단적 성격은 결국 대학의 보편성 추구라는 목적을 위한 수단적 의미 밖에 없을 것이지만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 관중의 눈앞에서 눈 깜짝할 사이에 가면을 바꿔 쓰는 연극인 중국의 변검(變臉)³⁾처럼 우리는 수시로 두 얼굴을 바꿔 써 가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지 자문해볼 일이다. 하여, 교수회가 두 얼굴의 비중을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정답은 없다. 다수결로 정한다면 51%의 독재가 가능하고, 공동체적 가치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강요한다면 개인의 자유와 창의를 무시된다. 양자 간의 관계설정에서 소통과 숙의(熟議)가 필요한 연유이다. “공익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것” 혹은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는 서양의 금언을 되새길 일이다. 모르긴 몰라도 이런 과정을 거쳐 교수회가 추출해낼 교수사회의 모습은 더도 없고 덜도 없고 꼭 우리네 수준을 반영할 것이다. 그 수준이 높다면 자긍심을 가질 일이고 낮다면 높이도록 노력할 일이다.

금번 호 편집 책임을 맡은 이로서 원고를 청하고 제 스스로 문제제기를 하면서 잡다한 상념을 떨치기 힘들었다. 상념의 한 편 끝은 교수회 앞날에 대한 일말의 우려였다. 진정 교수회에 대하여 비판적 견해를 듣고 싶었다. 소통을 위해서는 경계를 허물어야 하고 경계를 허물면 기성(既成)으로부터 의심 받게 된다. 불편한 상황이다. 그래도 예를 갖추어 청하였건만 여덟 분으로부터 원고 청탁의 외면을 받았다. 아쉽지만 전직 교협의장이셨던 이상혁 명예교수님의 글과 현 교수회 의장이신 박영무 교수님의 글로 가름한다. 곰곰 생각해 보니 교수회의 활동과 역할에 대한 찬반 견해가 문제의 본질은 아니었다. 소통하려는 의지 혹은 열정의 소실이 더 문제라는 생각이 들었다. 열정의 과잉으로 인한 질풍노도(疾風怒濤)의 캠퍼스를 걱정하는 것이 우스운 노릇이 되어가는 작금의 현실을 감안하건대 열정의 소실로 인한 나른함은 곧 개별 이익의 극대화 전략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 결과는 곧 교수회의 가치생산적 역할 방기로 인한 대학 내 공공영역의 축소일 것이다. 물론 기우(杞憂)에 지나지 않을 것이지만 장기간 방치하면 자율은 사라지고 전자인증 시스템에 교수 카드로 출근 확인할 날이 도래하지 말라는 법이 있을까?

그러나 또 다른 상념의 끝은 이만큼이나 해냈다는 자부심과 앞으로 더 잘 될 것이라는 희망에 대한 긍정적 편견이다. 아주대 교수회가 지난 10여년 걸어온 발자취를 여타 대학들과 비교해가며 반추해보자면 단순한 어렵짐작만으로도 속으로 단단해짐을 느낄 수 있다. 열정의 소실을 지레짐작하기에는 구성원들의 헌신을 통한 고단한 진전이 돋보인다. 십 여년 전 대학사회에 대한 상당한 이견(異見)으로 그간 소통의 길이 막혔던 분들과 대화의 접점을 마련하였고 잘못된 총장 선임을 부분적으로 바로 잡았으며 교수회의 평화적 견해표시가 일 년을 넘게 하루도 빠지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대학 본부의 반론과 고의적 무대응, 자료 숨기기에 불구하고 펀드투자 내역과 분식회계 실상을 자세하게 알린 것은 교수회의 저력과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예이다. 이런 저력과 에너지가 대학발전을 위해 응집시키지 못하는 민주적 지도력의 부재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그럼에도 문제의 본질적 해결이 없다고 답답해하실 수도 있다. 위로의 말씀 드린다. 금번은 원래 서서히 오기 마련이지요. 아울러 부탁의 말씀도 드린다. 그래서 당신의 한 말씀과 참여가 필요합니다.

1) 일상의 영향력으로 치자면 중앙(中央)일보일지 모르지만 지식인의 담론 형성에 끼치는 영향력으로 치자면 주변(周邊)일보라고 부름이 타당할 것이다. 실제 많은 교수들이 “왜 꼭 중앙일보의 순위 매김이 대학 평가의 기준이 되어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물론 고양이 목에 방울달기지만 말이다.

2) 이 말이 유명하기는 한 모양이다. 내가 가르치던 영어 교재에도 틀림없이 iron rice bowl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니 말이다.

3) 실제로 자전을 찾아보니 변검의 검(臉)자 뜻이 눈꺼풀이라는 말이었다.

답답한 아주대

이상혁(전 교수협의회 의장)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주대의 학내 분규 양상은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 재단 이사장의 무소불위 전횡은 계속되고, 이에 맞서 싸우는 교수들의 울곡관 로비 집회는 10년 전이나 다름없이 처량하기 그지없다. 김덕중 총장의 복귀 반대 투쟁 때는 수도권에만 10여 개 분규대학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정상화되고 아주대만 홀로 분규대학으로 계속 남아있다. 그 동안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사학재단들이 대학은 국민을 교육하는 공익기관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어 교수 사회와의 갈등이 사라진 것이 그 원인이라 생각된다.

그러나 아주대에서는 아직도 설립자(?)나 재단 이사장이나 대학을 개인재산으로 생각하고 교수들을 고용자와 피고용자의 관계로 취급하는 주종의식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착오적 사고방식 때문에 아주대는 계속 그 모양 그 꼴로 남아있게 되었고 인근 대학들보다도 뒤떨어진 대학이 되었다. 아주대가 새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문제를 야기한 설립자-재단이사장-총장-보직교수-평교수의 서열 순으로 잘잘못을 따져봐야 하겠다.

김우중씨 문제

우선 묻고 싶은 것이 하나 있다. 대우그룹이 해체되기 몇 개월 전에 건축비 부채 명목으로 1017억의 어음을 받아갔는데 그것이 정당한 조치였는지 묻고 싶다. 건축비는 절대로 갚으라고 안 한다. 단지 대우 측의 회계 처리상 필요하니 학교 부채로 잡아 달라고 하고서는, 약속을 어기고 결국 대학과 부속병원이 각각 78억원과 313억원을 갚도록 결정하였다. 그것도 건축비는 거의 두 배로 부풀려 받아간 것이다. 최근에는 Law School 만드는데도 직접 관여하는 등 학교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데 그것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여 참여하기 바란다. 법적으로는 김우중씨와 아주대는 아무 관계도 없다는 것을 엄두에 두기 바란다. 다시 말하면 아주대에 대하여 하등의 권리나 의무가 없는 사람이 이상한 기득권을 행사하고 책임은 조금도 지지 않으려는 사고방식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윤원석 이사장 문제

이제는 국내 다른 사립대학들의 재단이나 이사장이 어떻게 대학 운영에 관여하는지를 파악하여 대세를 따라가기 바란다. 사립학교법이 계속 재단에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어

법적으로는 재단 이사회의 권력이 막강하지만 지금은 "법대로"를 내세워 일방적으로 운영하는 대학은 거의 없고 재단과 교수 사회가 조화롭게 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현 추세가 아닌가. 돈도 없는 재단이 대학의 모든 일을 좌지우지하는 행태는 없어져야 하고 이제는 대학의 민주화에 동참해야 한다.

다른 이야기지만 이사장의 봉급문제를 따져보자. 예전의 사립학교 법에는 학교에 전 재산을 기부하고 생계가 곤란한 이사(이사장 포함)에게는 최소 생계비를 지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완화 개정되어 유급 이사장도 인정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사장자리가 상근직도 아니고 하루에 8시간씩 근무할 만한 일감도 없는데 상근직 월급을 타간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게다가 따로 상근이사도 있지 않은가? 여하튼 봉급 받는 만큼 학교에 봉사하기 바란다.

교수 사회의 문제

그 동안 총장도 여러 번 바뀌었지만 일부 총장은 교수들을 대변하기 보다는 이사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대학의 보직이란 감투가 아니라 서로 돌아가며 품앗이 하는 잡일꾼인데 보직에 연연하여 그릇된 처신을 하는 교수가 종종 보이는 것이 한심하다. 보직자는 교수들의 의견을 따라야 하고 교수의 품위를 지켜야 할 것 같다. 평교수들도 학생교육과 연구가 주업무이기는 하나 교육에 영향을 미치는 학교 운영에도 적극 참여하여 좋은 교육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할 필요가 있다.

끝으로, 선배교수로서 후배교수들에게 보다 교육하기 좋은 대학, 발전하는 대학을 못 물려주고 떠나게 되어 죄송하기 짝이 없으며, 지금도 울곡관 로비에서 고생하는 옛 동지들에게 용서를 구한다.

대학과 교수회

박 영무(교수회 의장)

대학의 구조조정, 경쟁력 강화, 성과 연봉제, 강의 평가, 대학의 철밥통 깨기 등 일방적인 논의와 비판, 심지어 대학 사회를 회화화하는 조소들이 언론 매체를 통해 끊임없이 들려온다. 이것에 의문을 달고 소명하는 이들에게는 시대를 역행하는 사람이라는 딱지가 붙는다. 그러나 일부 언론들의 일방통행 외에는 막상 한국에서 대학이 무엇이어야 하는가? 우리는 어떤 대학이 필요한가? 에 대한 성찰은 찾아보기 힘들다.

진리는 믿음에서 나온다는 중세적 명제가 진리는 지식에서 나온다는 근대적 명제로 변하면서 근대 사회에서 대학은 지식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래서 근대와 지식과 대학은 떼어서 생각하기 어렵게 되었다. 대학의 위기가 한국에서 더욱 크게 느껴지는 것은 근대를 우리에게 의해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스스로 겪지 못한 우리의 역사에 그 원인을 찾아 볼 수도 있겠다. 결국은 외부에서 유입된 학문과 지식 창조의 제도가 한국의 문화와 철학으로 그 근거를 발전시키지 못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요즘 한국의 대학이 신자유주의의 일방적인 유세와 비판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비틀거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여겨진다.

기업화를 강요받는 현실

일반적으로 요즘 대학은 효율과 경쟁을 강요 받고있다. 경쟁이 없었던 사회는 없었지만 경쟁이 랭킹으로 전락하고 타자를 쓰러뜨리는 전가의 보도로서 대학을 흔들고 있다. 대학의 책임자나 대학생들, 심지어 대학진학을 앞둔 학생들에게도 중요한 것은 대학의 교육과 연구의 내용보다 랭킹이다. 비판적 지식인 양성이니, 전문 분야의 특성화나 차별화에 따른 구별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구차한 변명으로 여겨지고 어느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몇 위다, 세계 100대 대학 진입이라는 구호가 대학에 대한 판결문처럼 회자된다. 그리고 언론은, 깊이 생각해 보면 애매모호하기 짝이 없는 순위를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것처럼 생산하고 전달한다.

필자가 미국에서 유학하던 80년대 중반, 미국의 주간지인 The US News and World Report가 처음으로 미국대학의 순위를 학과별로 보도하면서 큰 인기를 끌었던 기억이 있다. 이때부터 대학의 순위 정하기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그렇지 않아도 입시 경쟁이 치열하던 한국에서는 90년대 중반 중앙일보가 대학순위 보도로 지가를 올렸다. 기업화된 언론 매체의 마케팅 전략과 설익은 시장만능의 사고가 오작동한 것이다. 때마침 닥친 IMF 사태 이후 대학은 소위 무한 경쟁 체제 속으로 던져졌고 한국사회는 신자유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도배되기 시작하였다.

이 경쟁에서 대학의 건학이념이나 지향하는 가치나 차별화된 특성은 사라지고, 랭킹만이 남게 되었다. 대학은 값나가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대학기업이 되고 스스로 상품이 되어 마케팅 전략의 대상이 되었다. 대학교육은 품질 보증차원에서 관리의 대상이 되고 효율성과 생산성의 전문가들은 대학의 일상을 생산의 장터로 만들고 있다. 대학은 살아남기 위하여 생산성 평가와 효율성 체제에 순응을 강요받고, 공동체가치보다는 이윤을 창출하는 방식을 가르치기를 강요받고, 산업과 협력하여 시장성을 확보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심지어 시장성과 생산성에 뒤떨어지는 학과나 단과대학은 멸문지화를 당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한마디로 대학이 기업화를 강요받고있다.

대학의 자율과 자유

대학이 기업화 되고 있다는 것은 대학이 끝없이 생산을 추구하고 생산의 과정을 사기업의 방식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이다. 교수들은 한편으로 지식을 생산하고 교육산업을 부흥시키기를 요구 받으면서, 그 과정이 검증 내지 인증을 받는 시대가 되었다. 교수들은 수업시간에 왜 무엇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어떤 결과를 기대하는가를 미리 밝혀야 하고, 대학과 학생들은 그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여 교수들을 평가한다. 대학기업의 입장에서 교수는 생산관리직 일꾼이 되고, 학생은 교육의 소비자로서 만족할 만한 서비스를 요구하고 교육의 내용은 품질관리의 대상이 되었다.

이쯤 되면 대학의 주체는 더 이상 교수와 학생 또 그 사이의 지적인 교류가 아니다. 대학의 중심이었던 구성원의 자유와 자율에 기초한 공동체적 행위 양식은 서서히 기업형 행정관리 체제로 대체된다. 대학기업의 구성원들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구조에 물들어 진정한 대학의 구성원이기를 포기해 간다. 양적 경쟁을 강조하는 인센티브제도 속에서 교육과 연구에 불량품이 발생하고 심지어 ‘악화’(표절, 조작, 인기)가 ‘양화’(창의, 진실, 도덕)를 밀어낸다. 그래서 대학은 서서히 그리고 스스로 가치를 상실해 간다. 마치 개구리가 서서히 데워지는 가마솥 속에서 자신도 모르게 죽어가듯이. 이제 대학은 학문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배움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려는 사람들의 공동체, 소비자가 아니라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 그런 공동체로서의 대학은 이제 이상에 불과한 것인가? 이 사회에 그런 공동체는 더 이상 소용이 없어졌는가?

시대에 따라 대학의 모습은 변하였으나 그 본질을 논할 때 빠지지 않는 개념은 자율과 자유이다. 공부하는 사람이 제약 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글을 쓸 수 있는 자유와 대학이 어떠

한 형태이든지 학문 외적 간섭 없이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 자율을 말한다. 그 위에서 대학은 학문을 추구한다. 이미 결정된 진리를 전하는 것이 학문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을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로 추구하는 것이 학문이고, 그것이 진정한 과학이다. 중세대학이 '신의 자유'를 사고와 세계의 중심으로 삼았다면, 근대대학에서는 '인간의 자유'가 그 중심이 되고, 모든 당위성을 부여하는 최고의 가치였다. 그리고 현대의 대학에서도 여전히 진리 추구는 창조적 일탈과 파괴가 허용되는 자유 아래에서만 가능하였다. 그러므로 대학 구성원에 게 요구되는 으뜸덕목은 변함없이 자유와 자율이다. 이것 없이는 어느 시대 어디에서나 새로운 지식이 창출되지 않고 결국은 시대와 주체의 자멸을 막을 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대학이 대학다워야 함은 외적 요구와 비판이 거셀수록 더욱 절실한 필요조건이 된다. 이 조건이 사립대학들에게 더욱 절실한 것은 우리대학이 사학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사학과 교수회

자력으로 근대를 겪지 못한 한국에서, 해방 후 사립대학들은 대학운영체제로 미국식 이사회를 모델로 채택하였다. 미국 대학들은 일반인 통제 원칙에 따라 대학에 관한 모든 궁극적인 권한을 대학 밖의 일반 사회인들로 구성된 이사회에 맡긴다. 이 제도에는 미국의 민주주의 정신과 견제와 균형이라는 미국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가 담겨있다. 실질적으로 미국 대학의 이사회는 대학외부인으로 구성되고 교수회의 대표는 참가하지 않음으로써 이사회의 방식 여하에 따라서는 '대학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 그러나 유수한 대학들의 이사회는 견제와 균형의 상식을 좇아 법률상 부여된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하고, 총장은 교수회와 더불어 위임된 권한의 정도에 부응한 '대학의 자유'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민주주의의 경험이 일천하고 견제와 균형의 가치에 익숙하지 않은 한국의 사학법인에 도입되었을 때 사학법인과 교수회의 갈등은 예고된 것이었다.

한국의 사학법인은 미국식을 따라 총장은 가능하지만 교원은 배제한 채 외부인으로 이사회를 구성하는데, 이사회의 선임 조차 법인 설립자의 의중을 따라 이사장이 독단적으로 행사한다. 최근에 사학법의 개정으로 개방이사제도가 도입되어서 최소한의 개선 노력은 있었으나 대개의 사학들은 사학법 개정의 정신을 의미있게 실현하고 있지 않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많은 사학법인들은 법으로 규정된 교육의 공공성에도 불구하고 사학을 사기업으로 이해하거나 사학의 자주성을 법인의 자주성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IMF 사태 이후 사학법인들은 사학의 자율을 내세우면서 기업형 모델을 한국의 대학에 정착시키는데 집착하고 있다. 대학들은 자산 늘리기 경쟁, 대학의 랭킹 경쟁, 형

식적인 자율과 책임, 그리고 기업친화를 강조하는 과정에서 모든 문제는 재정문제로 환원시킨다.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의미에서 대학과 학문의 발전과는 멀다. 오히려 그 과정에서 사학법인이 대학의 자유와 자율을 부정하고 독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며 심지어 사기업적 이윤을 추구하는 부정한 행위로 수많은 사학분규가 발생하고 있다. 학생들과 교수들이 진리 탐구와 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며 군사독재 하에서 저항의 깃발을 들었던 70, 80년대의 대학은 오히려 자유와 자율로 움직였다. 부정과 억압에 저항하는 것은 자유를 추구하는 최소한의 행위이기 때문이라. 이 때 교수회는 사학법인의 대척점에 설수 밖에 없다.

글을 마치며

독재에는 이길 수 있어도 자본에는 이길 수 없다는 시대의 예언에 대학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인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본주의 시장 체제 내에서의 전문인으로 활동하도록 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나 자신의 삶과 현재를 공동체의 기억과 과거의 지혜를 통해 살피고 분석하는 지성인을 만들어내는 일은 더욱 중요하다. 어느 대학이나 그 사회에서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사회적 기능을 맡고 있을 터. 이미 많은 대학이 기업화 되어버린 상황에서 아주대학마저 기업화될 필요는 없고 그것이 바른 길도 아니다. 기업이 막강한 권력으로 등장한 IMF 이후 한국 사회에서, 대학이 자유롭고 비판적 배움의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더욱 무겁고 귀하게 여겨야 할 역할이다. 이것이 우리사회의 건강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대학의 가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대학이 이러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대학보다 더 많은 지식이 인터넷에서 거래되는 시대에 대학의 종말을 예언하지 말라고 누가 말할 수 있겠는가? 필자는 교수회와 함께 '기울어진 풍경 저편으로' 이 질문을 던지고 '다리를 절며' 오늘을 걷는다.

자유투고 1*

아주대의 국립대 전환 가능성

조 중열(전자공학부 교수)

나는 얼마 전에 아주대의 위상 추락을 실제로 경험하는 일을 겪었다. 시골에 살고 계시는 외삼촌이 암에 걸렸는데 치료를 위한 병원 예약을 내게 부탁하신 것이다. 나는 별 생각 없이 아주대병원을 권유하였다. 그런데 외삼촌은 아주대 병원은 애초부터 고려대상이 아니었고 최근에 완공된 병원 몇 군데를 거명하며 거기에 예약을 잡아달라고 부탁하셨다. 한 때 드라마의 촬영장으로도 쓰였던 아주대 병원이 이제는 시골 노인에게서도 대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마음이 무거워졌다. 전자공학부는 많은 졸업생이 삼성 LG 등 대기업에 취업하게 되는데 학교의 위상은 이들의 회사내 입지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 한 졸업생이 자기 회사에서의 우선 리크루팅 대상에서 아주대가 빠졌다는 말을 전할 때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었다. 그 졸업생은 차마 말로 하지는 않았지만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학교가 이 지경이 되었는데 당신네 교수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사기를 쳐서라도 학교를 도로 올려놔야 되는 것 아니냐.”

지난 10년을 돌이켜 보면서 이제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학교가 40등, 50등이 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본다. 새로운 돌파구로서 아주대를 국립대로 전환하는 문제를 논의할 필요가 있다. 아주대를 국립대로 전환하는 문제는 10년 전에도 학교 일부에서 논의된 적이 있으나 본격적인 진행은 없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다. 상황이 달라진 점은 아래와 같다.

1. 든든한 재단이 없으면 대중의 인지도가 하락하고, 학생모집, 취업, 연구 등 여러 면에서 불리하다는 점을 모두가 인식하게 되었다.
2. 대우그룹의 부도 뒤처리와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정보들이 노출되었다.
3. 최근 1년 사이의 교내 사태에서 재단이 취한 조치들을 보고 재단의 의식 구조를 잘 알게 되었다.

아주대가 대우재단과 결별해야 할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일부 사람들은 아주대와 아주대 병원이 대우그룹의 자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주대를 대우그룹 소속의 계열사 정도로 생각하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대우그룹은 국가에 막대한 채무를 남긴 채 파산하였고 공적자금이 투입되었기 때문에 아주대는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학교이고, 특정 회사나 개인에게 소속되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다가 대우그룹은 파산과정에서 여러 가지 불법적인 일들이 밝혀졌으며 추징금 환수는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다. 거기에 관련되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아주대학과 병원을 자신

들의 재산으로 생각한다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다.

아주대의 국립화를 논의하자면 최근에 국립대가 된 인천대의 경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천대는 1979년 선인학원 소속의 사립대로 출발하여 심각한 교내분규를 겪다가 1994년 인천 시립대가 되었고 2010년 국립대가 되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민 130만 명이 참가한 서명 운동도 있었다고 한다. 인천대의 분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이사장 백인엽씨는 1981년에 국가헌납의사를 밝혔으나 시립화가 실제로 실행된 것은 94년 김영삼 대통령 시절이었고, 인천시립대로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분규와 법정공방이 계속되었다. 사립대에서 시립으로 넘어가면서 구조조정 및 과거 인백정리차원에서 교수와 직원 수 십 명이 해임되었는데 이들이 소송을 제기하여 결국은 인천시가 패소하였다. 인천시가 대학을 인수할 때는 기존의 인력을 모두 승계할 의무가 있다고 재판부는 판결하였다. 재정적인 부담과 더불어 계속 문제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인천시는 국립화를 추진하게 되었다. 교육부는 처음에는 국립화를 반대하다가 결국은 받아들였는데 명목상으로는 2010년부터 국립대가 되지만 실제 학교에 대한 국가지원은 2014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인천대의 경우를 보면 아주대 국립화가 추진되더라도 그 과정이 상당히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지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이다. 교육부는 전국의 국립대를 줄여가는 추세에서 새로운 국립대의 출현을 별로 달가와 하지 않을 것 같다. 하지만 경기도에는 아직까지 국립대학이 별로 없기 때문에 경기도 지역 학생들에게도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동등하게 부여한다는 점에서 교육부가 아주대학의 국립화를 끝까지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경기도와 교육부가 재정지원을 분담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아주대가 국립대가 된다면 구성원 모두에게 득이 된다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약간 무리한 면이 있더라도 구성원 모두의 이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래는 2차대전 초기에 영국을 망쳤던 Chamberlain 수상을 쫓아낼 때의 탄핵 연설이다.

*You have sat too long here
for any good you have been doing.
Depart, I say,
and let us have done with you.
In the name of God,
Go!*

* 자유투고란의 글은 교수회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소통을 위한 반론과 지지글을 환영합니다.

자유투고 2*

“외부에 알려지면 학교만 망신” 이라고?

김철환(사회과학부 교수)

여러분은 “통킹만 사건”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통킹만은 베트남 북쪽에 위치해 있다. 1964년 8월 2일 그 곳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구축함이 북베트남(당시에는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전쟁 중이었음) 어뢰정 3척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받고 이를 격퇴하였다는 것이 미국이 발표한 소위 “통킹만 사건”이다. 미국의 발표 내용은 북베트남 어뢰정들이 여러분은 “통킹만 사건”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 통킹만은 베트남 북쪽에 위치해 있다. 1964년 8월 2일 그 곳에서 작전 중이던 미국 구축함이 북베트남(당시에는 베트남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전쟁 중이었음) 어뢰정 3척으로부터 선제공격을 받고 이를 격퇴하였다는 것이 미국이 발표한 소위 “통킹만 사건”이다. 미국의 발표 내용은 북베트남 어뢰정들이 어뢰와 기관총으로 먼저 공격을 가해 왔지만, 공격을 당한 미국 구축함이 주변에서 공동으로 작전을 수행하던 같은 함대의 다른 구축함과 항공모함의 가세 하에 즉각적으로 반격하여 북베트남의 어뢰정 1척을 격침시키고 2척에는 타격을 가했다는 것이다. 통킹만 해상전투 이전에도 이미 베트남전에 개입하고 있었던 미국은, 이 사건을 빌미로 베트남 전쟁에 본격적으로 나서게 되었다. 그 해 8월 7일 미국 하원은 만장일치로 “통킹만 결의안”을 채택하여 미국의 베트남전 참전을 본격화시켰다. 미국은 북베트남에 대해 대대적인 폭격을 시작하였고 해병대를 베트남에 상륙시켰다.

그런데 1971년 미국 국방부의 비밀 보고서(소위 “펜타곤 페이퍼”)는 “통킹만 사건”이 미군이 베트남전 개입을 위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했으며, 결국 1995년에는 베트남전 당시 미국의 국방장관이었던 로버트 맥나마라도 “통킹만 사건”이 미국의 자작극이었음을 시인했다. 최고의 군사기밀로 일반에게는 철저히 숨겨졌던 미국의 치부가 백일하에 드러나게 되었던 연유는, 하버드 출신의 경제학 박사인 다니엘 엘즈버그가 이러한 사실을 뉴욕 타임즈에 제보했기 때문이다.

제보에 접한 뉴욕 타임즈는 이를 1면 머리기사로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 후 와싱턴 포스트도 뉴욕 타임즈를 뒤따르는 일련의 기사를 내기 시작했다. 당시의 미국 닉슨 행정부는 엘즈버그의 정신상담 기록까지 들추어내며 그를 인격적으로 흠집 내고 폭로의 신뢰성을 훼손하려 시도했다. 엘즈버그는 무기징역의 형까지 받을 수 있는 국가기밀 누설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또한 닉슨 행정부는 뉴욕 타임즈를 상대로 “펜타곤 페이퍼” 게재를 중지시키는 법적인 조치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미국 대법원은 닉슨 정부의 고발조처에 대해 “국가기밀로 진실을 은폐할 때 국민의 희생은 더욱 커진다.”고 판시하여 엘즈버그와 뉴욕 타임즈의 손을 들어 주었다.

그렇다면 미국정부의 치부를 만천하에 드러내서 얻는 사회적 편익은 무엇일까? 베트남 전쟁의 양측 전사자의 수는 약 150만 명이고 부상자는 20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도 참전하여 4,407명이 전사하고, 11,000여 명이 부상했다고 한다. 전쟁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후유증도 만만한 것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고엽제 피해자이다. 이러한 피해는 대를 이어서 발생하는 비극이다. 전쟁의 피해를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참전을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사람이 만에 하나라도 있다면 이는 전쟁의 참혹한 진실을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황현산 교수는 “전쟁은 우리 삶을 파괴하고 인간을 인간 아닌 것으로 만든다”고 말한다. 그는 이어서 “전쟁은 단순한 추상명사가 아니다. 그것은 사람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포탄이며, 구덩이에 파묻히는 시체 더미이며, 파괴되는 보금자리이며, 생사를 모른 채 흩어지는 가족이다. 이 오월에 강변에서 자전거를 타는 소년들은 어느 골목을 헤맬까. 지금 축제를 벌이는 젊은이들의 소식을 어느 골짜기에서 듣게 될까. 공부하고 일하고 춤추는 아이들은 어디로 갈까.”라고 탄식한다 (한겨레, 2010. 5. 29).

“통킹만 사건”의 실체는 북베트남의 공격이 아닌 미군이 조작한 거대한 음모라는 엘즈버그의 폭로는 결과적으로 베트남 전쟁의 참화가 계속되지 않도록 막아 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미국의 치부를 미국 밖의 세계 전체에 알려 “국가의 망신”을 초래했다는 비난과 국가기밀 유출을 혐의로 무기징역의 위협을 감수하면서도 내부고발자로 나선 까닭을 엘즈버그 자신은 이렇게 밝혔다. “이 전쟁은 범죄다.”라고. 엘즈버그의 양심고백에 힘을 보탠 것은 거짓된 명분으로 시작된 전쟁의 참상을 외면하지 않은 언론과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는 미국 연방대법원이었다. 이와 함께 거짓된 전쟁을 끝내자는 반전운동을 지지한 일반 시민들의 양식도 큰 힘이 되었다.

미국 역사의 한 페이지가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할 난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와 우리 가정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국가권력의 서슬이 시퍼랬던 유신시절은 유신헌법에 대한 논의만으로도 긴급조치를 위반했다며 군사재판에 회부되던 때였다. 그 시절에 국내외에서 민주화 운동에 가담하는 것은 반정부 운동이 아니라 반국가 행위로 간주되었다. 독재와 인권탄압에 저항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전개되던 민주화 운동이 해외에 알려지는 것에 대해서 원초적인 거부반응을 보이던 박정희는 국내 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외신기자나 외국인사와 접촉하는 것을 매국 행위로 매도하였다. 그 뿐만 아니라 “바나나 공화국”에서나 있을 법한

* 자유투고란의 글은 교수회의 공식적 견해가 아닙니다. 소통을 위한 반론과 지지글을 환영합니다.

코미디 같은 형사법인 “반국가 행위자의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1977년 12월 31일자로 자행하고 실제 사법적 처리를 위협하였다. (당시 미국에 망명한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이 자신의 과거 주군이었던 박정희의 비행을 의회 청문회에 나가 적나라하게 까발리자 그 것에 분개한 박정희의 지시로 제정된 것으로 알려진 이 법은 헌법재판소가 1996년에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폐기되었다.) 그와 같은 엄혹한 시대상황 속에서도 독재정권의 실상을 국내외에 고발하고 몸으로 저항하는 운동이 없었다면 군사독재는 지속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체득한 역사적 경험이다. 만일 모두가 ‘매국 또는 반국가 행위’라는 낙인이 두려워 침묵하였다면, 대법원 판결이 나자마자 20시간이 지나기도 전에 8인의 귀중한 목숨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인혁당 사건”과 같은 비극이 발생하는 야만의 시대는 지금까지도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가부장적인 한국의 과거 가족체제에서 가정폭력은 흔한 일 가운데 하나이었다. 한 두 번의 폭력에 견디지 못하여 친정으로 도망간 여인들에 대한 일반의 시각은 ‘참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폭력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 엄마를 보다 못한 자식들이 이를 이웃이나 가까운 친척에 알리는 일은 ‘집안 망신’이라고 매 맞은 엄마들조차도 생각했었다. ‘집안 망신’을 피하고자 가정 폭력을 쉬쉬하다 초래할 수 있는 비극은 없었을까? 이 비극이 생명의 문제로까지 변질 수 있는 가능성은? 실제로 이러한 비극은 발생했었다. 야만의 극치이다. 가정 폭력의 문제가 세상에 알려지고 나서야 이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선은 싸늘해졌다. 덧붙여 관련 법률까지 제정되고 나서야 가정폭력을 사회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았는가. 학교에서의 매를 드는 체벌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리 “사랑의 매”라고 강변해도 때리는 행위는 폭력일 뿐이므로 폭력은 추방되어야 한다. 폭력을 추방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폭력행위를 알림으로써 만천하에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나는 지난 5월 26일 아주대학교 교수회에서 학교 구성원을 상대로 “펀드투자의 실상”을 설명하는 자리에 참석했다가, 이 학교가 과연 내가 지난 27년간 몸 담았던 대학인가 하는 의문이 들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 펀드 투자의 손실금액 규모에 놀랐고,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 없이 탈법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점에 놀랐으며, 회계 상에 나타난 “분식”에 이르러서는 놀라움을 넘어 경악했다. “정도를 걷는”다는 우리 대학이 학교의 구성원들에게 실질적인 피해와 정신적인 피해를 초래한 사안에 대한 정보 (그것도 법으로 공개가 정해진) 제공을 기피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이를 은폐하고 조작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하여 분식까지 했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리라.

더욱 참담한 것은 박종구 총장직무대행이 학생들을 대표한 학생회장단에게 왜곡된 자료를 보여주며 해명이라며 오도된 설명을 하는 것만으로도 부족해서 “펀드투자에 대한 얘기가 외부에 알려지면 학교만 망신”이라는 상식 이하의 언급을 전해들은 점이다. 나는 우리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지적

수준이나 교양의 정도가 이러한 몰상식한 강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납득할 수준은 아니라고 믿는다. 결핵균이 폐 속에 있으면 이를 치료해야지 망신이라고 숨기려는 학생들이 과연 있겠는가? “외부에 알려지면 망신”이라는 궤변은 학교 구성원들에 대한 모독이다. 실제로 망신스러운 것은 이 정도의 지적, 도덕적 수준인 사람이 대행일망정 일시적으로 학생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학교의 대표자이고, 특채된 정년보장교수라는 점이다.

잘못되었으면 바로 잡아야 한다. 거짓은 추방해야 한다. 조작하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한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상을 알아야 한다. “외부에 알려지면 학교만 망신이다”라는 궁핍한 변명으로 명확한 잘못을 호도하고 숨기려는 행위는 그 조직을 파멸로 끌고 갈 뿐이다. 엔론이 그랬고 대우가 그랬지 않았는가. 분식회계에 따르는 법적 책임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학생들이 옳고 그름을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 (이는 하버드 대학의 5대 교육목표 가운데 하나이다)을 보유했을 수 있는 교양인으로 키우는 교육적 책임이 더 크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교양을 키워주어야 할 교육기관이 학생들에게 거짓과 은폐를 보여준다면 그들의 장래는 어떻게 되겠는가. 이런 점에서 박종구 현 총장직무대행은 학교 교육을 책임질 자질과 도덕성이 결여되어 있다. 아주대학교를 위해서 그래도 다행스러운 일은 이 분이 총장으로 선임되지 않은 일이다. 아마도 재단의 이사장과 이사진들이 지난 13년의 기간 동안에 내린 결정 중에서 우리 학교를 위해 가장 잘 한 일이 이것이 아닐런지. 불행한 일은 이 분을 “교육”대학원의 정년교수로 특채했으므로, 직무대행 역할이 끝나도 그 곳의 교수로 10년 이상을 재직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을 학생들이 배울 수 있을지 걱정이다.

우리 학교가 빨리 제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2023발전계획”이 우리 학교의 전국 20등에서 23등의 위상을 간신히 유지하는 발전계획으로 변질될 수 있다. 상상하기에도 끔찍한 일이다. 이러한 비극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학교회계의 투명성 확립이 우선이다. “외부에 알려지면 학교만 망신”이라는 망신스럽고 전근대적인 저급한 사고에서 벗어나, 펀드투자 및 회계분식 문제의 공개는 건강해지기 위한 진통으로 생각해야 한다. 더욱이 우리학교와 재단의 회계분식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사실은 10여 년 이상 근무한 구성원들은 모두 알고 있지 않은가? 1999년에 한겨레에 보도되었던 78억원과 시사저널에 보도된 100억원 (병원에 전가된 부채 233억원의 일부)에 관한 얘기를 다시 설명할 필요는 없어야 한다.

아주대학교의 구성원이라는 사실이 “망신스럽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우선 사실을 알아야 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해야 하고, 옳다면 행동해야 한다. 내가 빠지는 “우리”는 더 이상 “우리”가 아니다.

소식

I. 284차 법인 이사회 개최: 회계 결산, 약대 신설, 이익잉여금 용도지정

284차 이사회가 2010년 5월 20일 열려, 2009학년도 아주 대학교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 결산(안) 심의와 더불어 약대학 신설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졌다. 또한 대우학원 수익회계 이익잉여금을 법인목적사업비로 충당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 이번 이사회에서 결산(안) 심의를 하면서 교수회와 대학평의회가 ‘불법적인 펀드 투자와 분식회계’와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하여 전혀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교수회와 대학평의회가 결산자문을 하면서 많은 문제를 제기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 참석한 총무처장은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언급하지 않았다. 직무대행도 4월 말 현재로 평가손실이 결산기준일 기준 25.5%에서 19.4%로 줄어 들었다는 사실만 강조하는 무책임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아래와 같은 내부감사인의 이사회 발언은 교수회가 밝혀 낸 분식회계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거나 알고 있으면서도 은폐하려 했던 의심이 간다. 이는 감사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이다.

펀드 233억원 중에 46%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나, 학교는 교육과학기술부 및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침에 따라 기금별 평가손실이 취득가액의 1/2 이상일 경우에만 시가로 평가한다는 근거에 의거 평가손실을 인식하지 않았으며, 관련 내용은 이사회에 보고를 드리고 재무제표에는 반영하지 않고 감사보고서의 주석으로만 기재 하였습니다. 학교는 원금을 회복한 주식형펀드 20억원을 2009년 12월에 환매하였으나, 2010년 2월말 현재 유가증권 투자금액 213억원의 평가 손실은 54억원으로 손실률은 25.5%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학년도 회계처리 기준상 기금별 평가손실이 취득가액의 50%를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재무제표에 평가손실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이사장의 발언은 자신의 본분(‘법인의 사업체의 관리자와 학교의 장으로부터 매월 말 현재의 수입·지출보고서와 재산증감보고서를 받아 ... 해당총괄부에 각각 그 보고사항을 기록하여 재산과 재무의 현황을 상시 파악’ 하는 것)을 망각한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불법적인 펀드 투자와 분식회계’ 문제를 강 건너 불 보듯하는 발언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 사 장 : 펀드문제는 학내에 많은 부분이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아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펀드 운용을 이사회에서 결정한 사항이 아니냐 또는 특정 임원이 운영하는 자금운용회사가 관련된 것이 아니냐라는 루머도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학내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은 학교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석연치 않은 문제점이 있을 것이라는 선입관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해시키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해에는 학교 측의 답변이 부족했던 책임도 있을 것입니다.

- 약대 신설과 관련하여 박승철 이사는 ‘20명 입학정원은 운영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약학대학의 신설.유지 비용 대비 그 운용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비하다’라고 발언하여 약대 신설을 대학발전의 동력으로 삼으려는 의지가 결여되어 있음을 나타냈으며 이에 이사장은 ‘자금 운용계획 등을 포함한 세부자료를 가지고 차기 이사회에서 논의’ 하도록 관련 안건을 ‘심의 보류’하자고 동조하였다.
- 이번 이사회 결정 사항 중 특히 주목할 것은 약 27.5억원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을 법인목적사업비로 적립한다는 내용이다. 전기이월결손금이 10.3억원이던 대우학원 수익사업회계가 37.8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내게 된 것은 ‘병원 지하의 임대사업’을 재단이 자신들 관할로 가져간 것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 올해 전기이월결손금을 제하고도 27.5억원에 달한 이익잉여금은 매년 더욱 늘어 날 것이다. 이렇게 이익잉여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전입금의 일부만 부담하는 재단의 행태는 결코 떳떳하다 할 수 없다. 또한 연장선상에서 자금부족을 이유로 약대 유지를 재고하려는 행태는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 정 유치하고 싶으면 ‘교비회계에서는 연평균 30억원씩 건축 운영해서 소요예산을 조달’하겠다는 발상 (이하 교무회의 결과 참조)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재단의 이익잉여금은 재단목적 사업비로 적립하고 약대 신설은 교비를 건축운영해서 조달한다는 이야기는 재단의 존재이유를 의심케 한다.

II. 5차 교무회의 심의 안건 : 약대 신설 관련 교비 회계 30억 건축운영 '확인'

2010년 6월 1일에 이번 학년도 제5차 교무회의가 열려 심의사항 없이 보고만 이루어진 것으로 회의록이 공개되었다.

- 이번 교무회의에서는 '기타 보고사항'으로 총무처장이 2010년 6월 1일에 이번 학년도 제5차 교무회의가 열려 심의사항 없이 보고만 이루어진 것으로 회의록이 공개되었다.
- 이번 교무회의에서는 '기타 보고사항'으로 총무처장이 <교수회의 펀드투자 보고회 및 반박문 관련 보고>를, 그리고 총장직무대행이 <2011학년도 약학대학 신설 관련 특별보고>를 하였다고 한다.
- 총무처장은 '대학의 추가의견'이라며 구성원들에게 배부된 내용을 발표하였는데, 교수회의 보고회 및 반박문에서 적시된 문제들에 대해서 해명하지 못하면서 소위 '추가의견'을 발표하여 '분식회계' 문제가 현재진행형임을 드러냈다.
- 총장직무대행이 2011학년도 약학대학 신설에 따른 주요 추진계획들에 대해 상세 설명하고, 교무회의는 '향후 약학대학 운영과 관련한 우리대학의 실천사항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확인하다'라고 회의록이 작성되었다. '교비회계에서는 연평균 30억원씩 건축 운영하여 약학대학의

소요예산을 조달'한다는 것과 같은 중요한 내용을 심의도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설명한 것에 대해서 교무회의가 '확인하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

- 대학구성원들이 노력하여 약학대학 신설 허가라는 성과를 올렸으면 이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은 마땅히 자임하고 나서는 것이 대학 발전에 관심이 있는 재단의 모습일 것이다. 그런데, 위의 284차 이사회 회의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사장과 일부 이사는 약학대학 신설에 매우 부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 약학대학 신설 신청 당시에 이미 자금운용계획은 세워졌을 것이다. 만일 입학정원 축소로 인해서 자금운용 계획을 수립할 때 예상한 것보다 교육수입이 줄어든다면, 그 차액이 얼마인지 공개하고 조달 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순서일 것이다. 일체의 논의 없이 '교비회계에서는 연평균 30억 원씩 건축 운영하여 약학대학의 소요예산을 조달'한다고 일방적으로 총장직무대행이 선언하는 것은 여러 의구심을 자아낸다. 약학대학 신설을 반납하게 되는 경우에 재단이 책임을 벗기 위한 명분 쌓기이거나, 혹은 펀드 손실로 인해 불가피한 재정 건축을 약학대학신설용 재원 조달로 위장하려는 것이 아니길 바란다.

III. 교수회 주최 <불법 펀드투자 및 분식회계에 관한 진상규명 보고회> 개최

2010년 5월 26일에 '불법 펀드투자 및 분식회계'에 관한 진상규명 보고회가 학생, 교수, 직원 등 다수의 학내 구성원을 대상으로 율곡관 영상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발표와 질의, 토론으로 이어진 이 날 보고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열기가 뜨거웠다. 교수회 특별조사위원회 (독고 윤, 이 순일, 이 재호, 조 중열)의 조사내용을 이하에 요약한다.

- 교수회 특별조사위원회의 보고에 따르면 특정기금의 펀드투자가 합법화되기 이전부터 펀드투자가 이루어졌으며 그 규모는 대학이 교과부에 보고한 233억원을 훨씬 상회하여 대략 293억원에서 353억원에 달한다.
- 우체국 채권과 MMT 상품을 제외하여도 유가증권 취득액은 293억원 정도로, 이런 규모의 유가증권 취득 사실이 지금까지 감춰져 온 것은 분식회계를 통해서였다. 결산 대차대조표에 펀드들을 모두 예금으로 기장하여 왔으며 교수회와 대학평의원회가 결산자문을 위해 펀드투자내역을 공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할 때도 일체의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 놀라운 사실은 대학 홈페이지에 공시된 결산자료와 교과부(사학진흥재단)에 제출된 결산자료의 형식이 다르며 공시된 외부감사보고서에서는 펀드 관련 사항이 기록된 '주식'이 누락되어 있다는 점이다.
- 더욱 놀라운 것은 교과부(사학진흥재단)에 제출된 기금운용 관련 보고서와 외부감사보고서의 주식도 분식되었

다는 사실이다. 기금별 평가손실액이 투자액의 1/2을 넘지 않도록 분식하기 위해 연구, 건축, 기타(발전)기금에서 각각 20억원, 60억원, 153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축소 보고한 것이 공개되었다. 60억원 가량의 채권 및 채권형 펀드 매입 사실을 숨겼으며, 또한 53억원 상당의 펀드는 유동자금으로 구입하고도 이를 모두 특정기금이 매입재원인 것으로 분식하였다.

- 이와 같은 분식을 통해 각 특정기금 적립 주체의 '투자동의 또는 지출결의서' 없이 임의로 펀드투자가 이루어진 것을 숨겨 오다가, 큰 손실을 보게 되자 사후적으로 규칙을 제정하여 각 기금에 손실을 전가하려 한 사실도 보고되었다.
- 펀드투자가 적절한 의사결정 과정 없이 이루어지다 보니 상당한 규모의 달러표시 해외부동산 펀드를 취득하며 이를 담보로 선물환 계약을 체결하여 약 14억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는 일까지 생겼다.
- 평가손실을 제외하고도 운용수수료와 기회비용(예,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최소 수 십억원의 손실이 펀드투자와 관련하여 발생하였는데, 이는 향후 대학발전에 큰 장애로 작용할 것이다.
- 펀드관련 손실을 보전하는 방안으로 부속병원 전출금의 강제 증액, 기타(발전)기금별 손해 전가, 등록금 인상 등이 예상되는 바, 불법적이고 무능한 펀드투자의 피해를 대학구성원들이 고스란히 떠안은 불행한 사태가 예상된다.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예의를 갖추되 정곡을 찌르는 익명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이번 투고들은 교수회에 관한 것입니다. 격려와 비평 모두 환영합니다.)

아우성 하나 :

사람들이 모여 집단을 이루면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해 정치 구조를 만들고 소통의 시스템을 만든다. 그러나 그 집단의 이익이 더 큰 전체집합으로 존재하는 집단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문제는, 부분집합의 집단이

전체집합의 더 큰 집단의 원칙과 추구하는 바와 상충될 때 어떻게 그것을 조율해야 하는 가이다. 이와 같은 경우에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히 ‘공공의 이익’이다. 교수회도 무엇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원칙이고 행동인지를 늘 유념해야 한다고 본다.

아우성 둘 :

학문적 성과와 교육의 권위로 무장된 교수들은 각자가 완성한 공고한 지식에 근거한 기준을 갖고 세상일을 대하는 바, 교수들은 자기 개인의 기준이 강하여 개인주의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판단의식을 갖기 쉽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 쉽다. 과연 교수들을 집단화된 의견으로 결집시킬 수 있을까? 단체

로서의 교수회가 지향해야 하는 점은, 명백한 원리원칙을 설정하고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그에 따라 교수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역시 쉬운 일은 아닐 터, 모두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아우성 셋 :

아주대학교 교협 및 교수회는 그간 파란만장한 사건들을 겪었다. 재단이 건강하면 학교 구성원들의 집단들도 편안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다시 겪고 있지만 기본적인 역사의식과 공동체 참여의식을 갖고

모두 중지를 모아 이 난관을 헤쳐 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은 너무 낙관적인 바람인가?

아우성 넷:

최근 펀드투자 손실, 분식회계, 예산운영 등 다양한 이슈들에 대해 교수회가 다각적인 조사와 대응을 위한 노력을 해주고 있다. 교수회 그리고 더 나아가 대학의 구성원으로서 그저 감사드릴 따름이다. 이 모든 노력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 중 하나가 올바르게 정상적인 총장의 선출과 정상적인 재단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자는 교수회가 구체적인 활동에 더해 지속적으로 대학, 특히 현재의 아주대학교를 위한 바람직한 총장상(總長象)과 재단상(財團象)을 보다 분명히 강조해 주었으면 한다. 그 대상이 누구든 말이다. 아주대학교는 최근 10년 동안 돈이 많은 대학이 아니었다. 제반 여건이 좋은 대학도 아니었다. 심지어는 수시 전형에 응시한 고등학생들에게조차 면접 시에 “학교 시설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라는 충격적인 말을 빈번하게 들을 정도의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그나마 아주대학교를 지탱할 수 있게끔 해 준 힘 중 하나는 무얼까. 필자는 바로 아주대의 개별 교수님들의 노력이 아니었나 생각한다. 별로 믿을 만 한 재단은 아니지만 다양한 대학 평가 지표들 중 그나마 1~2년 전까지 아주대에서 경쟁력을 보였던 것이 바로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의 능력치들을 반영하는 지표들이었다. 물론 이나마도 이제 한계를 드러내고 있지만 말이다. 우리 아주대의 교수님들께서 그러한 능력치를 교육과 학문 분야에서 발휘해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분명하다. 바로 자율과 그 자율을 인정하려는 노력

이였다. 자율은 믿음에 기초해서만 가능하다. 그러기에 아주대 교수님들 대부분이 지니시는 자부심은 정말 대단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우리 아주대의 상층 부에 해당하는 분들이 아주대 교수님들에 대해서 지니고 있는 이른바 ‘교수를 바라보는 관점’은 실로 서글프기까지 하다. 개별 교수들에게 다가오는 많은 황당하기까지 한 제도들과 이메일 그리고 문건들은 ‘아, 이 대학은 교수를 이따위로 밖에 보지 않는구나. 그리고 감시하고 조절하려는구나’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게 한다. 더욱이 이러한 비뚤어진 관점이 쌓인 결과는 주위의 교수님들 한 분 한 분을 보면 분명해진다. 우리는 점점 더 소모적이고 불필요한 관료사회에서나 볼 법한 일들에 시간과 사고를 낭비하고 그 반대급부로 점점 연구와 교육의 시간이 줄어들고 있음을 발견한다. 교수에 대한 관점이 올바르게 돌아오지 않은 대학은 결국 어디로 갈까? 대답은 분명하다. 교수들을 신뢰하는 총장과 재단, 교수들에 대한 정상적인 관점을 지닌 총장과 재단, 이를 분명히 지니고 있지 않은 분들은 대학이 아닌 다른 조직에 존재해야 함을 분명히 알려주셨으면 한다. 그 대상이 어떤 분들이시든 말이다. 두서없이 적고 나니 교수회 일로 고생만 하시는 분들께 문득 죄송해진다. 이 소리를 들어야 할 분들은 정작 다른 곳에 계시니 말이다.



소통(疏通)과 담론(談論)

편집위원회

보다 나은 대학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소망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읽고 공감하였던 “꽃들에게 희망을”이란 책을 기억하실 겁니다. 한번쯤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동화입니다. 바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가끔 생각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대학 사회, 특히 교수 사회에 몸담고 있으면서 교육과 연구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이라는 본연의 업무로 인해 무척이나 바쁘게 지내는 생활 가운데, 한번쯤 숨을 들이키며 고개를 들어 함께 호흡하는 공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서로 생각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탁류청론(濁流淸論)이라는 제호(題號)는 너희는 탁하고 우리만 깨끗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탁(濁)함 가운데서도 청(淸)함을 함께 찾아가자는 뜻입니다. 교수의 신분으로 이 대학과 사회를 살아가면서 함께 나누어야 할, 외면할 수 없는 삶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탁류청론은 그런 것들에 대한 소통의 공간입니다.

지금은 마치 특정 사안에 대해 어느 한 쪽의 의견을 대변하고 있는 소식지로 오해할 수도 있으나, 그것은 우리가 현재 당면하고 있으며 외면할 수 없는 주제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당면한 사안에 대해 마치 한 목소리로 문제를 지적하는 분들의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 같아, 조금 다른 시각

에 대한 포용력을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소통’과 ‘담론’이라는 최소한의 원칙 외에는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특히 소수의 건강한 의견이 표출되는 공간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대학 사회를 꿈꾸는 사람들의 소망을 함께 나누었으면 합니다. 앞으로는 더 넓고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 함께 하였으면 합니다. 외면할 수 없는 유무형의 짐을 걸머진 집단의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그것들을 내려놓고 서로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나누어야 할 주제를 제안해 주시고, 때로는 특정 주제에 대해 지정 토론의 형태로 참여하실 수도 있으며, 자유로운 형식으로 다양한 형태의 단상(斷想)을 전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연유로 실명이 부담스러우시면 예의를 갖춘 무명씨의 글도 makim@ajou.ac.kr로 보내주시면 흔쾌히 접수합니다. 탁류청론이 그런 ‘소통’과 ‘담론’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아울러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광고>

- 그간 교수회 활동에 많은 격려와 지지를 보내주셨던 박옥걸(사학), 이수복(경제) 교수님께서 이번 학기를 마지막으로 정년 퇴임하십니다. 건강과 보람찬 나날들을 기원합니다.
- 방학기간 중 <탁류청론>은 휴간 합니다. 9월초에 다시 뵙겠습니다.
- 9월호는 기존의 논의를 기초로하여 대학의 거버넌스에 관한 특집 좌담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인 이사회는 교수사회에서 불신임된 윤원석 이사장을 해임하라!

아주대학교 교수회

이사회는 책임 총장제와 선임 절차를 확정하고 즉각 시행하라!

아주대학교 교수회